



[위기의 K-바이오] 신약성공 확률 美서도 1% 불과 실패 용인 문화 필요 04



Economy

코스피	1942.29 (+4.54)	코스닥	594.17 (+4.13)
금리 (미국 3년)	1.18 (0.00)	환율 (원-달러)	1216.20 (+5.70) (12일)

서울 등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 10년 전매제한

(전국 31곳)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10월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 거주 의무기간도 연내 도입 단기 시세차익 투기수요 차단 택지비 산정기준도 객관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12일 국토부는 "주택 시행령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주택 공급 위축, 집값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 3번>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바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는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기준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매 제한 기간 내 매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

는 거주무기기간(최대 5년)도 연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지비 산정 기준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객관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후보양을 시행할 수 있는 공정률 수준도 기존 50~60%에서 약 80% 수준으로 개정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정부, 日 조치에 반격 나서 심사 등 절차거쳐 내달 시행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를 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제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



'일본 백색국가 제외' 발표하는 성윤모 장관 /연합뉴스

하면서 28개국이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정부, 日 석탄재 수입심사 강화로 日경제보복 맞불

시멘트 생산 어저나... 산업계 전전긍긍

방사능 함유 여부 등 안전강화 명목 이달부터 수입 석탄재 통관 전수조사

석탄재가 한·일 경제전쟁에 느닷없이 등장하며 산업계에 불뚱이 튀고 있다.

시멘트·레미콘 제조 원료의 하나로 쓰이고 있는 석탄재 가운데 수입산에 대해 환경부가 통관시 분기별 1회씩 하던 조사를 전수조사로 바꾸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수입 석탄재는 전량이 일본산으로 우리 정부는 방사능 물질 함유 여부 등 환경안전 강화 명목으로 이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강화'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세운 사실상 1호 조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약 400건에 달하는 수입 석탄재 통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이나 무연탄과 같은 석탄을 태운 뒤 남은 재로 1차 연소뒤 아래에 깔리는 바닥재(bottom ash)와 집진기를 거친 보다 고운 비산재(fly ash)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제조에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레미콘 제조에는 비산재를 사용한다. 시멘트의 경우 석탄재를 사용하기 전에 천연원료인 점토를 주로 썼지만 광산개발 억제 등으로 지금은 석탄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레미콘 제조 과정에선 시멘트의 일부를 석탄재(비산재)로 대체해 섞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서 수입한 석탄재는 128만5000톤(t)에 달한다. 이들 수입산 석탄재는 바닷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쌍용양회(동해), 삼표시멘트(삼척), 한라시멘트(옥계), 한일시멘트(평택항이용)가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내륙사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옛 현대시멘트) 등은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쓰고 있다. 국내 레미콘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조치로 일본

산 석탄재를 쓰고 있는 4개 시멘트회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것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차질을 빚고, 이는 곧 시멘트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공급 부족 사태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후방산업인 레미콘 산업과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멘트회사들은 지난해 총 5569만 3000t의 시멘트를 생산했다. 이를 위해 315만1000t의 석탄재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수입산 석탄재(128만5000t)가 40.8%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이 위축될 경우 시멘트 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문제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일본산을 쓸 이유가 있는냐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총 940만t에 달한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8월 수출 22% 감소... 반도체 34% '뚝'

對中 28%, 對日 32% 줄어

8월 수출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등의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또 감소세로 출발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15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8일로 작년 대비 0.5일 적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2%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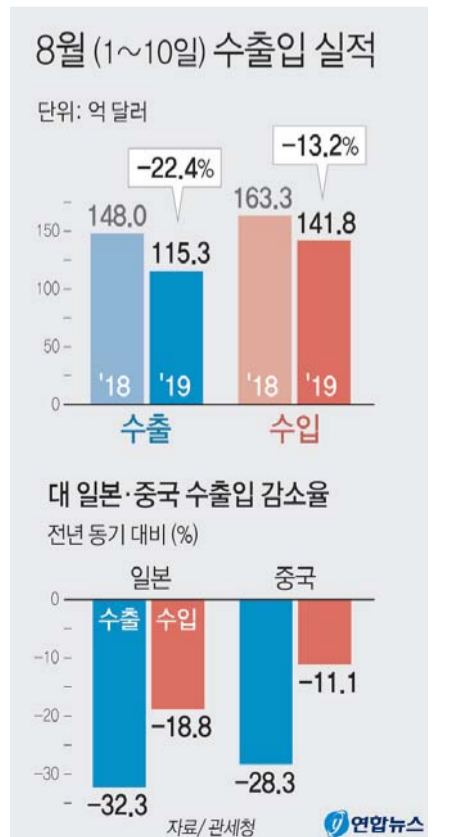
수출액은 전달 1~10일에 비해서는 3.1% 줄어든 것이다.

앞서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8개월 연속 줄었다.

1~10일 수출은 품목별로 반도체가 34.2% 줄었고 석유제품(-26.3%), 승용차(-6.0%)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무선통신기기(41.6%), 가전제품(25.6%) 등은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28.3% 줄었고 일본은 32.3% 감소했다. 베트남(-1.6%), 미국(-19.5%), 유럽연합



(EU)(-18.7%)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석대성 기자